

# 입법정책정보

2023. 6. -제7호-



대전광역시의회

○ 입법정책정보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 사항과 최신 외국정보 등을 법제처 국가정보센터, 국회도서관에서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 || 목 차 ||

|                                |    |
|--------------------------------|----|
| <b>I. 상위법령 제·개정</b>            | 1  |
| 1. 관광진흥법                       | 1  |
|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4  |
| <b>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b>     | 6  |
|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6  |
|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7  |
| <b>III. 자치법규 참고정보</b>          | 9  |
| <b>IV. 최신 외국 입법정보</b>          | 14 |
| 1.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       | 14 |

# I 상위법령 제 · 개정

## 관광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78호, 2023. 6. 20., 일부개정]

### □ 제 · 개정 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 □ 주요내용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2023. 6. 20.>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 □ 참고사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2022. 9. 30. 시행)

제2조(시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4.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사업
5.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614호, 2023. 7. 3., 일부개정]

## □ 제 · 개정 이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시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9162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자전거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 다른 교통수단 및 보행자의 통행량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자전거교통안전표지와 자전거 이용자 안전시설의 설치·운영 현황에 대해 점검·평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 주요내용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이하 “자전거통행위험지역”이라 한다)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전거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
  2. 다른 교통수단 및 보행자의 통행량 규모
  3. 자전거도로가 가지는 지형적·구조적·물리적 특성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통행위험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현황에 대해 점검·평가해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통행위험지역에 대한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전거통행위험지역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참고사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2023. 2. 24. 시행)

제3조(시장의 책무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자전거도로 설치 시 도로의 연계·연속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518호, 2023. 6. 7., 전부개정]

## □ 제 · 개정이유

급변하는 수상레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들이 수상레저 안전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면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절차를 정하고, 효율적인 조종면허 시험제도 운영을 위하여 면허시험 실시 방식을 개선하며,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절차(제3조)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함.

###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제도 운영의 개선(제8조제2항 단서,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5항)

- 1) 조종면허 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글을 알지 못하여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대신하여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2) 조종면허 시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의 다음다음 날부터 각각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다. 수상안전교육 면제 요건의 강화(제14조제1호 및 제3호)

수상레저활동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을 접수한 날 또는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의 시작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수상안전교육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유사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상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수상안전교육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만 수상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절차 및 실시 결과의 공개 방법(제25조제2항 및 제3항)

1)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목적·대상 및 점검 일시 등을 해당 안전점검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2)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 등의 명칭·위치, 점검 기간, 점검 결과 내용 및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함.

마. 의무보험·공제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제33조)

수상레저안전 관련 보험·공제의 가입의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 등의 가입 관리전산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은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관리 및 개선, 보험 등의 가입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보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시행 2023. 6. 3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674호, 2023. 6. 30., 제정]

#### □ 제정이유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에게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병역 복무에 동기를 부여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

####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병역 복무에 동기를 부여하고 전념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해보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 보험범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거나 군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시행 2023. 6. 1.]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197호, 2023. 6. 1., 제정]

## □ 제정이유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탈모”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
2.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비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탈모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안건번호:의견23-0072 /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 의뢰안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공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관련)

##### □ 주요내용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공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공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리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각주: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판결; 법제처 2023. 4. 25. 의견제시 23-0025 참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판결; 법제처 2023. 4. 25. 의견제시 23-0025 참조).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단을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6조제2항에서는 지방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받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단으로부터 결산서를 보고받고, 승인을 할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단으로부터 보고받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지방공단의 결산 승인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공단으로부터 보고받은 결산서를 승인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공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안건번호:의견23-0150 / 요청기관: 전라남도]

### □ 의뢰안건

전라남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 주요내용

#### [질의요지]

전라남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전라남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해야 하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외국인처우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가목) 또는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결

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외국인처우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가목)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나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처우법 제2조제1호에서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외국인처우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가목), 외국인처우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목),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다목), 또는 그 밖에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라목)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는 “다문화학생”이란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부모 언어”란 다문화학생 부 또는 모의 모국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동아리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전라남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

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 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관장 사무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6호) 및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사업은 전라남도교육감이 수행하는 전라남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에서’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으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한국어 및 결혼 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의 취지가 같은 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외에 추가적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처우법에 따른 “재한외국인” 등의 자녀에게 이중언어 교육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고, 그러한 내용의 조례가 법령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각주: 법제처 2023. 3. 15. 의견제시 23-0074 참조) 해당 내용을 정하는 조례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남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

#### □ 주요내용

○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 패권의 확보 여부가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법령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미국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의 현황 및 대책 방안에 대한 국회 정기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주요 국들은 공통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확대하여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 독일, 프랑스는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부고발자 면책규정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영업비밀 등이 해외에서 유출되는 경우에도 법률이 역외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 미국, 영국,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의 관련 법령을 우리의 현행법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주요국에는 존재하는 법률의 규정을 중심으로, 입법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살펴본다.

[출처] 국회법률도서관(원문)